[p.232]

10. 주택법령상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지형연립주택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② 소형주택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7㎡ 이상)을 세 개 이내로 구성할 것, 다만,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 ③ 도시형생활주택에는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소형주택으로 구분한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소형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 ⑤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로 하여야 한다.

[p.230]

06. 주택법령에서 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일정한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② 소형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 ③ 민영주택이란 민간건설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④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여야 한다.
-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p.233]

12.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 ① 폭 8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② 철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 ③ 폭 12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④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된 주택단지

[p.229]

02.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 ②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③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 ④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 ⑤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p.229]

03.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 ②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 ④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연립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p.266]

1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p.267]

17.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12층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3개층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240]

09.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한다.
- ④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 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p.237]

05.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②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 ④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⑤ 위 ④의 경우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p.238]

06.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 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적고, 인가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p.242]

14.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거전용면적 100m²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 ④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p.242]

13.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③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 ⑤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p.245]

20.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 ①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②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③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④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⑤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p.244]

17.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④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236]

02.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 ③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④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p.246]

24.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⑤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p.248]

28.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p.251]

31.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위 ①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공구별로 분할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 (이하 '분할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④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p.250]

29.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90일부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90퍼센트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80퍼센트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사업주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p.253]

33.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바르게 된 것은?

-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위 ①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 ③ 위 ①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④ 위 ①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⑤ 주택의 소유자들은 위 ①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용검사권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p.258]

05.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 ② 주택상환사채의 저당
- ③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 ④ 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광고
- ⑤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

[p.255]

0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한다)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 ⑤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고 높이가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p.256]

<대표유형>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3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p.262]

11.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③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3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한 곳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투기과열지구지정 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p.265]

14. 주택법에 정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적용하는 전매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④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p.260]

09.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 ①의 경우, 일정한 행위란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④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⑤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페이지	문제 정답	페이지	문제 정답	페이지	문제 정답	페이지	문제 정답
p.232	10. ②	p.230	06. ①	p.233	12. ①	p.229	02. ②
p.229	03. ⑤	p.266	15. ②	p.267	17. ⑤	p.240	09. ④
p.237	05. ③	p.238	06. ①	p.242	14. ④	p.242	13. ④
p.245	20. ③	p.244	17. ③	p.236	02. ③	p.246	24. ①
p.248	28. ③	p.251	31. ①	p.250	29. ④	p.253	33. ③
p.258	05. ②	p.255	01. ①	p.256	<대표> ②	p.262	11. ⑤
p.265	14. ①	p.260	09. ⑤	.	.	.	.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수업용 프린트이므로 별도의 해설은 제공되지 않고 정답만 제공되며,
수업시간에 전체 문제에 대한 풀이가 진행됩니다.”

- 오시훈교수-